여권-대선 주자, 한미 FTA 대응 갈등 고조

범여권 '통합논의' 꼬이나

'千·金·鄭' 反FTA 연대 조짐…정계개편 흐름 좌우 가능성

〈정배〉〈근태〉〈동영〉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대응 문제를 놓고 범여권이 재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합의 밑그림과 방법론을 놓고 '사분오열'된 범여권이 이번에는 대형 국가적 어젠다인 한미 FTA를 둘러싸고 다시금 갈라지는 양상이다.

특히 FTA 문제는 단순 경제정책적 차원을 넘어 각계각층의 이해갈등과 이념적 논쟁이 첨예하게 맞붙어 있는 이슈라는 점에서 각 정파의 입장차가 범여권 '헤쳐모여'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범여권내 FTA 논란의 기본 대립축은 우리당과 대선주자군이다. 정세균 의장이 이끄는 우리당은 FTA 추진을 지지하고 있고, 김근태 정동영 전의장 등은 협상 중단 또는 반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시야를 탈당그룹 쪽으로 넓히면 구도가 더욱 미묘해진다. 먼저 중도성향이 강한 김한길·강봉균 의원 주도의 '통합신당모임'은 외견상 신중론이지만 FTA를 지지하는 성향의 의원들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 반면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민생정치모임'은 어느 정파보다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탈당그룹 내부에도 균열점이 생기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FTA 논란의 전개양상에 따라서는 당 잔류와 탈당그룹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우리당-통합신당모임, 대선주자군-민생정치모임이라는 '어색한 구도'가 형성될 개연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 '천(千 : 천정배)·김(金 : 김근태)·정(鄭 : 정동영)'으로 대변되는 범여권 대선주자간의 '반(反) FTA 3자 연대'가 띄워질 가능성이 있다.

천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정 전의장을 향해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면서 "FTA에 대해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고 말했고, 이에 김 전의장은 "검토할 만한 제안이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정 전의장은 "원탁회의를 통해 여러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들 대선주자군의 연대가 가시화될 경우 FTA 찬반의 구도는 물론 범여권 정계개편 논의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범여권 통합논의의 중심고리격인 민주당의 입장도 중요한 변수다. 민주당은 공식 당론을 정하지 않았지만 반대기류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대중 전대통령은 FTA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터라 최종 방향이 어떻게 잡힐 지는 미지수다. 서울대 정운찬 전총장과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등 외곽제 3후보군의 '비판적 신중론'도 주목할 요인이다.

우리당은 천 의원과 김·정 전의장 등 대선주자들이 FTA를 자신들의 대선전략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비판했다.

현재로서는 FTA 논란이 이달말 협상종료 시점을 전후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범여권 내부의 갈등을 표면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미 FTA 협상중단 단식 농성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고위급 회담이 시작된 19일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위원장 오병윤·앞줄 가운데) 당직자들은 광주시 동구 삼복서점 앞에서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위원장 이수근)과 각 지역위원회, 지방의원들도 전남도청과 순천시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미 FTA 내주 서울서 '끝장 토론'

고위급 회담 난항…농업·자동차 등 핵심쟁점 절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한을 10여일 앞둔 19일 한미 양측은 타결점 모색을 위해 서울과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을 통한 막판 절충에 들어갔다.

양측은 이번 주 협상에서는 남은 쟁점을 더 줄인 뒤 다음주 서울에서 통상장관급의 '끝장 토론'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나 자동차와 무역구제, 농업과 섬유 등 핵심 쟁점 의견차가 워낙 커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18일(현지시간) 협상장인 미국 워싱턴 D.C의 르네상스 메이플라워 호텔 인근에서 이틀날부터 시작될 고위급 협상 진행 방향을 사전 조율하는 등 협상을 사실상 시작했다.

현지 시각 19일부터 시작되는 고위급 절충에서는 ▲자동차분야 세제·제도개편(미국 요구)과 관세철폐(한국 요구) ▲반덤핑 제도 개선(한국 요구) ▲개성공단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한국요구) ▲외국방송 더빙 허용(미국요구) ▲의약품 신약 최저가 보장(미국요구) 등의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양측은 쟁점을 좀 더 축소하고 잔여 쟁점은 '주고받기'식 패키지로 정리하는 작업을 오는 21~22일까지 벌인 뒤 이를 서울에서 열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또는 카란 바티아 부대표)간 통상장관 회담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고위급 협의에서는 완전 타결되는 분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오는 26일 서울에서 추가로 고위급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20일(현지시간)부터 워싱턴 워터게이트호텔에서는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과 스캇 퀴젠베리 USTR 수석협상관이 섬유분야 고위급 협상을 갖는다.

우리측은 이 협상에서 대미 주요 수출제품의 관세를 5년내 철폐하고 원산지 판정방식에서 미측의 원사기준(얀 포워드) 예외 인정품목을 최대한 늘려주면 국내 업체의 경영정보 제공이나 미국측의 국내 기업 현장조사 등 요구사항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회 차원서 DJ 방북 논의해야"

민주당 김효석 의원 주장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19일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간 특사교환이 필요하며 현 단계에서 남북 모두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분이 김대중(DJ) 전 대통령"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김 전 대통령 방북과 특사 문제를 논의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당 및 교섭단체 협상'을 제안하면서 "DJ 방북문제를 청와대나 특정 정치세력이 독점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정쟁을 불러오면서 방북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DJ 방북 문제를 논의하고 진행시킴으로써 국가 원로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열린우리당은 남북문제를 정권 재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하고, 한나라당도 열린우리당의 한반도 평화관련 4대 제안을 호들갑 정도로 폄하해선 안된다"며 "정치권은 당리당략적 입장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협정 체결 및 군사재배치 등 냉전체제 종식 방안, 대북지원 투명감시체제구축, 남북평화특위 확대, 남북국회회담 추진 등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와 4·3 전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특별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현장과 시각

원산지 표시 제대로 하라

이종태 경제부 차장

음식점에서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명확하지 않은 단속기준, 원산지 증명서의 허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거검사의 비현실성, 부족한 단속인력 등 문제점 투성이다. 이를 두고 '허울뿐인 규정'이라는 비아냥마저 나온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라 올 1월부터 실시된 원산지 표시제는 영업장 면적 300㎡(90평) 이상의 음식점에서 국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육우·젖소로 세분하고, 수입산은 수입국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단속기관인 시·군·구 관계자들은 쇠고기 반입량은 무시한 채 영업장 면적만을 토대로 점검 대상업소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해야 하는 90평 이상의 음식점은 광주 101개, 전남 109개 등 210개이다.

결국 영업장 면적이 90평에 미치지 못하는 음식점은 '법망'을 비켜갈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잘못된 잣대로 인해 광주시 서구의 경우 음식점 수는 4천개가 넘지만 불과 66개만 단속대상으로 선정돼 '쇠고기 안전성 담보와 한우의 경제력을 모색한다'는 취지 자체가 무색한 실정이다.

원산지 증명서의 허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거검사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이 제도에 따르면 해당업소들은 표시된 고기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고기의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육안으로는 고기 종류를 구분할 수 없어 증명서상의 고기와 판매 고기의 일치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수거검사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해당업소도 많고 매일 여러 부위의 고기가 들어오는데, 일일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거검사를 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속인력 부족도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광주시 각 구청마다 2~3명에 불과한 인력이 모든 대상업소를 꼼꼼히 점검하기란 불가능하다. 더욱이 내년 1월부터는 음식점 쌀 원산지 표시제까지 시행될 예정이어서 현재의 단속인력만으로는 '수박 겉핥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

무릇 정책이란 실현가능성이나 합리성을 외면하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자치단체가 충분한 단속인력을 확보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전문인력과 노하우가 풍부한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단속권한을 주는 것도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아닌가 한다.

이와 함께 음식점에서도 해당 쇠고기의 품종과 유통경로, 질병 유무 등에 관한 내용을 표기하는 '이력추적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jtlee@kwangju.co.kr